

사상초유 '현재 마비사태' 두고 與野 설전… 서로 “네 탓”

자유한국 “김기영-김명수 돈독 위장전입 의혹 답 정직하지 못해”
더민주-김기영, 자유한국-이종석 바른미래-이영진 재판관 후임추천

국회가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 재판관 부족 사태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현재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김현정 현재 사무처장은 상대로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발언 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어제 대통령께서 현재 공백 상황이 국회 탓이라고 했는데, 전국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000명의 법관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돈독하다는 사실을 안다”며 “(인사청문

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정직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

종석 후보도 적격자가 아니므로,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를 표결해, 현재 최소 운영 요건인 재판관 7명을 충족 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각각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 참모를 지낸 뒤 연방대법원장으로 일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는 약전 인수식 해석이라고 맞섰다.

삼권분립 논쟁도 이어졌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현재소장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 봉을 합쳐, 사실상 6명의 헌법 재판관이 대통령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워지는 구조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이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을 이유로 야당이 청문보고서 체택을 거부했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현정 사무처장은 “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 지위의 막중함은 저는 짐작만 하지만, 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현재를 올스톱 시킨 당사자인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가 정상 업무 못 하도록 만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재 구성원 여러분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하고 허리를 굽히기도 했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성과공유제 도입 대기업 6.8% 91곳 불과”

수탁기업 6360곳… 中企의 0.2%
대기업 대비 중기 임금 60% 수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기업 참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과공유제 추진현황(2013~2018. 9)’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총 329개사이며 이중 대기업은 91개사로 전체 대기업 1332개의 6.8%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8조에 따라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이 이익이나 성과를 수탁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에 일부 배분함으로써 협력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과공유의 유형으로는 현금배분,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에게는 동반성장 가점, 공공조달 참여 우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총 360만 여개

중소기업의 0.2%에 불과하다.

한편,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2016)에 따르면 전 산업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9.6%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1.5%로 더 떨어진다.

어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성과공유제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성과공유제 도입을 장려하고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손 놓은 해외자원개발… 2년간 방치”

산업부 국감

“자원개발 방향성 제시·총괄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수립해야 할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2년이 지난 지금도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까지 다음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원래 당장 내년에는 제7차

기본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해외의존도가 96%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자원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종합 역할을 해야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라 산업부는 매 3년마다 10년 단위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해외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 성과만 추구하다 부실과 비리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산업부는 2016년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꾸리기도 했다.

혁신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원 3사는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000억원을 투자해 14조5000억원을 회수했고, 손실액은 15조 9000억원, 부채규모는 51조5000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부실을 털어내고 자원개발 정책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속히 제대로 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메인비즈협회, 17일 ‘혁신성장’ 포럼

경영혁신 우수기업 시상도 진행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 협회)가 ‘혁신성장’을 놓고 대규모 포럼을 연다.

아울러 동우씨엠 등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우수기업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메인비즈협회는 오는 1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혁신성장으로 대한민국

을 경영하라!’를 주제로 ‘2018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막식에선 대상을 받은 동우씨엠, 최우수상을 받은 대연, 영우티엔에프리드 그리고 우수상에 오른 휴넷, 다원엔지니어링, 앤에지이엔티, 인커뮤니케이션즈, 비에이에너지, 이지엔터내셔널, 삼녹에 대한 시상식이 펼쳐진다.

또 조찬세미나는 메인비즈협회의 간판

프로그램인 ‘굿모닝CEO 학습’으로 진행한다. 연사로는 이번 대회에서 경영혁신 우수상을 받은 휴넷의 조영탁 대표가 ‘직원 몰입의 비밀! 행복경영과 혁신 DNA’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지는 ‘중소기업 경영혁신 정책 미나’에선 경영혁신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3개 기업의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표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종호 교수의 ‘중소기업 경영혁신촉진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과제’ 발표, 전문가 토론이 각각 있을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라”며 전방위로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합회는 소속 회원들이 십시일반 내놓은 성금으로 집회를 치른 바 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 스스로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존권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도) 반드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서 “집회 역시 소상공인들의 현안을 놓고 이야기한 것 뿐인데 특히 주무장관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우리가 애비없는 자식이니’는 한탄까지 나온다. 흥장관은 (소상공인들의) 대변자도, 위로자도 아닌 외면자가 아니라는 것이다”라면서 “흥장관이 (취임 당시)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밝힌 만큼 소상공인들과 소통을 통해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장관과 주무부처 그리고 당사자(소상공인)가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정책 성공률도 높아지는데 마치 ‘서자’ 취급하면서 대화 상대를 ‘폐신(passing)’만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연합회를 매섭게 쏘아보고 있는 여당은 향해서도 할 말이 많다.

/김승호 기자